



2017 대선정책 트렌드리포트 #2

청년, 일자리 정책 그것이 알고 싶다

창년이어는미래

2017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김없이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무엇이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정책 평가와 분석으로
<2017 대선정책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그 두 번째 리포트에는
'대선 정책 그것이 알고 싶다, 청년·일자리 정책'
을 담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대선주자들이 펼치는 청년정책이
좀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가지기를 기원해봅니다.

청년이여는미래

01. 그것이 알고싶다

- ✓ 문재인 청년 일자리 정책
- ✓ 안철수 청년 일자리 정책
- ✓ 유승민 청년 일자리 정책
- ✓ 홍준표 청년 일자리 정책

02. 청미래THINK TANK

- ✓ 청년, 대선 TALK TALK

그것이 알고싶다

1. 문재인의 청년·일자리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 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2명 고용하면 3번째는 임금 전액지원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기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3년간 총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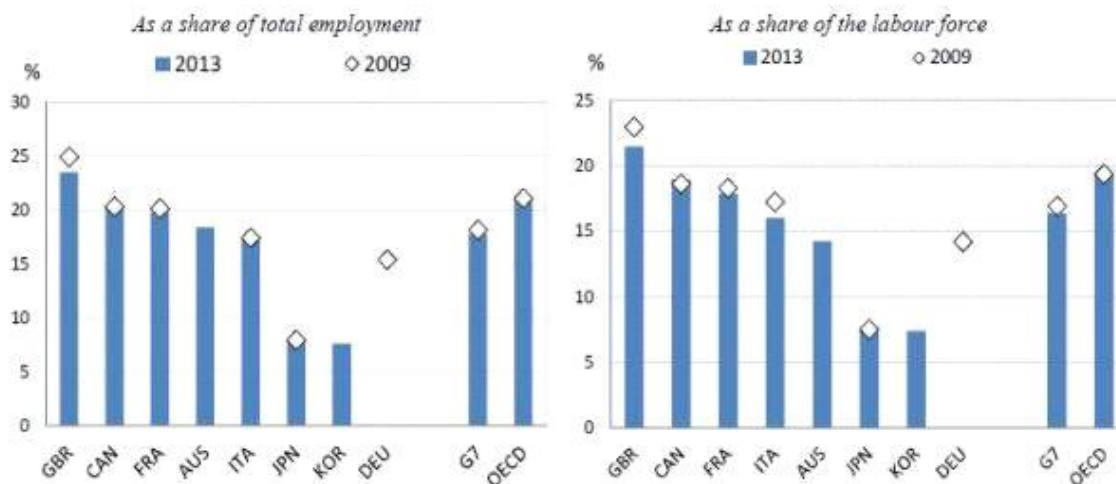
<그런데 말입니다>

① “허걱, 문재인 후보가 보여주지 않은 통계가 있다니”

#이런식이면 #문모닝_문에프터눈_문이브닝_문나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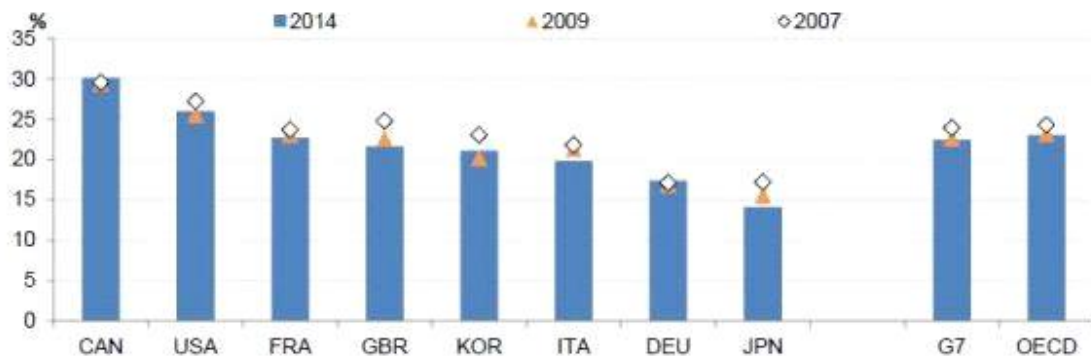
- 아래표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OECD자료<Government at a glance(정부개요) 2015> ‘공공부문 고용 현황’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국가 평균(21.3%)의 1/3수준(7.6%)으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표> 공공부문 고용 현황(2009년 및 2013년)



- 불편한 진실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같은 자료 바로 다음 항목 ‘공무원 인건비 비중’(아래 표)을 보면 OECD 국가 평균(23%)과 우리나라(21%)가 큰 차이가 없다. 쉽게 말해 공무원은 적은데, 인건비는 많이 든다는 것이다. 100명 고용할 일자리를 50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자리 하나 늘리기도 어렵다. 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철벽이자, 실업 절벽을 만드는 일이다.

<표> 전체 일반정부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2007년, 2009년 및 2014년)



② “공무원 아닌 청년들에게는 헬조선”

#공무원_공화국_각 #망한_그리스_각

- 모든 부분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공무원만 늘어난다면, 그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클까. 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대기표 뽑고, 고시촌으로 들어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두가 공무원인 세상이 아니라, 공무원·삼성맨·정규직 아니어도 살만한 세상이다.

- 선택받지 못한 청년들은 나쁜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고, 그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안정적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나라에서 빚을 내야 한다. 결국 그 빚과 부담은 미래세대의 몫이다. 문 후보는 81만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21조5천50억의 예산을 이야기했다. 이는 다음 대통령 임기 5년에만 해당하는 예산이며 연금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한 금액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폭탄 돌리기 공약이다.

- 공공부문 일자리의 단순한 양적 확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담을 수 있는 질적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청년들 일자리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부터 경직된 임금과 고용의 변화를 리드해갔으면 한다.

③ “우리가 마트 세일상품인가?”

#2명고용하면_1명지원 #투플러스원_각

- 단순히 인건비가 없어 중소기업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건비가 낮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 환경과 중소기업 경쟁력, 근로자 임금격차와 근로 환경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임금지원만 해주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 채용은 또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검증이 어렵다. 이는 오히려 노동시장 자체를 왜곡해, 청년실업문제는 그대로 둔 채 중소기업 경쟁력만 갉아먹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알고싶다

2. 안철수의 청년·일자리 정책

청년고용보장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수준 보장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는 2년간 1200만원(월 50만 원씩)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상자는 최대 연 10만 명으로 5년간 5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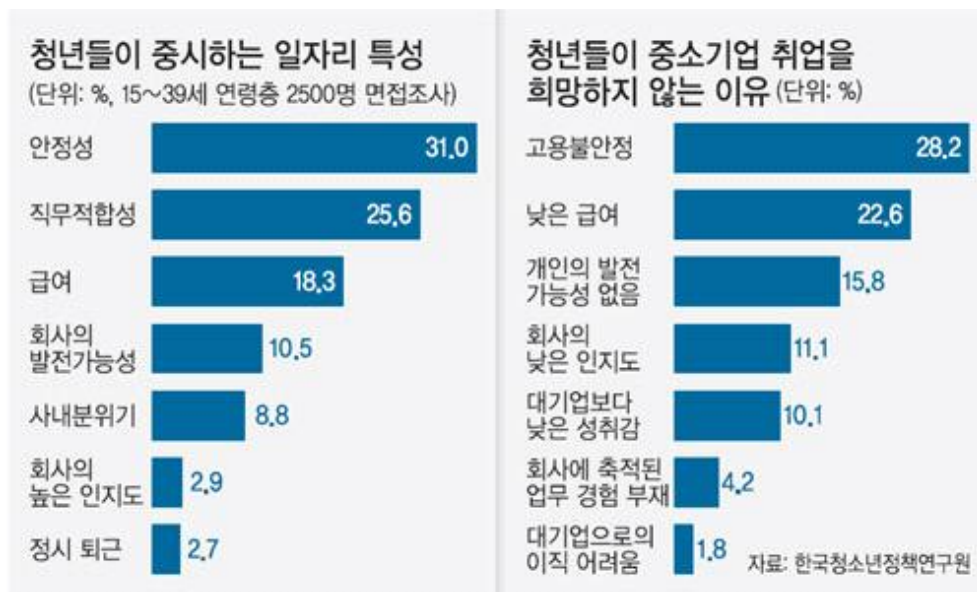
“5년 정도가 지나면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빈 일자리가 생겨 최악의 청년실업 시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① “임금만 보장해준다고 좋은 일자리가 되나?”

#5년후는_누가보장

#중소기업_망하는길 #청년도_망하는길



- 그래프에서 보듯,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낮은 급여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정을 비롯해 발전 가능성, 회사 인지도 등 복합적 요인들이 얹혀있다. 결국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되어야하는데, 한시적 임금보장은 이러한 근본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노동·산업시장을 왜곡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 예산(5조 4000억원)은 예산대로 든다. 더구나 지원받는 2년이 지나면 중소기업이 근속기간까지 고려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년들은 그 동안 받은 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서 일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2년간의 희망고문이다. 일시적으로 청년들의 지갑만 채워줄 뿐, 근본적인 만족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줄 수 없다.

② “5년 후, 빈 일자리 생긴다고 어떻게 장담하나?

#안파고_5년후_예측??

#그와중에_4차산업 #일자리상실의시대_커밍순

- 안철수 후보는 “5년 정도가 지나면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빈 일자리가 생겨 최악의 청년실업 시기를 벗어나게 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한시적임을 가정하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는 해외 대부분의 나라가 겪는 공통의 문제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현재 일자리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청년 인구가 줄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한다고 빈 일자리가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국가 지도자는 도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장밋빛 전망이 우세해도 대비해야 할 판에, 잿빛 전망이 우세한 일자리 문제를 너무 쉽고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안철수 후보는 특히 4차 산업 분야에 본인의 경쟁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의 동력은 민간시장에 있고, 정부는 보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안 후보의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4차 산업은 단순히 기술발전의 문제만이 아니다. 나라와 사회의 운영 생태계를 진화시켜야 한다. 정부와 정치의 과제가 여기에 있다. 가까이는 노동법, 노동시장, 교육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후보가 비전과 경쟁력이 있는지는 더 지켜봐 할 것 같다.

그것이 알고싶다

3. 유승민의 청년·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달성”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총량제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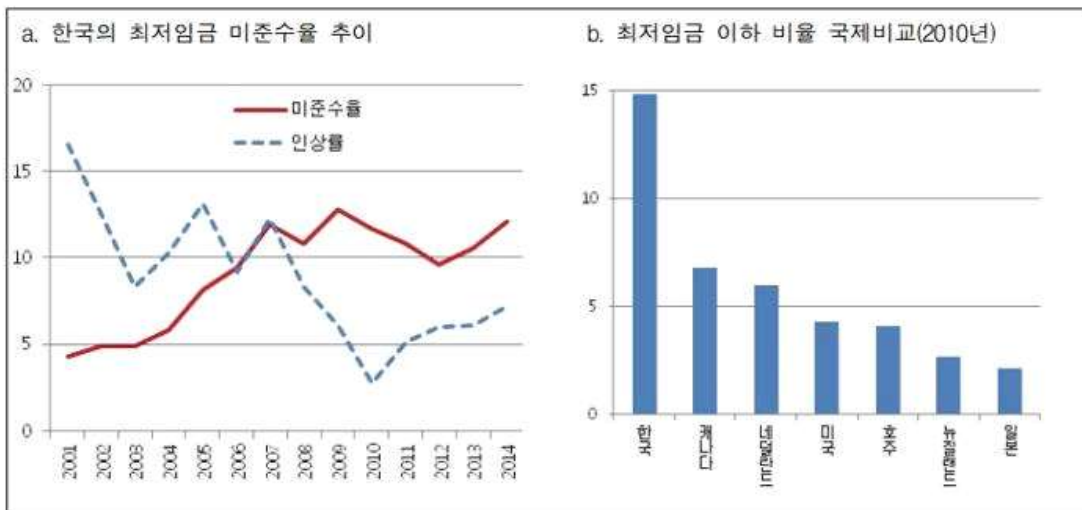
<그런데 말입니다>

① “지금도 최저임금 못 받는다 π.π”

#헤리아π.π #최저시급6,470원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타 국가들의 3배에 이르고, 최저임금 미준수의 70% 정도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영세한 곳일수록 최저임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최저임금 미준수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각 연도: OECD(2015, p.44)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3%에 육박하고, 이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히 사업주가 폭리를 취한다고만 볼 수 있을까. 연 15%라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감소와 영세 사업주들의 몰락을 부추길 수 있다. 사업주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준수를 감독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② “최저임금 인상이 떠미는 청년실업”

#누굴위한_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이라쓰고_청년실업증가라읽는다

- 한참 경기가 좋을 때라면 모르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3%대 성장도 어렵다. ‘최저임금 올리자’는 구호가 마냥 좋아 보이긴 하나,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악화와 채용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수준에서라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 정작 보호해야할 취약 계층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③ “비정규직 없는 세상보다, 비정규직도 살만한 세상이 필요”

#공무원_삼성맨_아니어도 #비정규직의_눈물

- 모두가 공무원, 삼성맨이 될 수는 없다. 임금 높고 정년 보장된, 누구나 바라는 안정적 일자리는 이미 다 차있다. 비정규직 총량까지 정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정규직VS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고착화 시키는 일이다. 유리칸막이는 없애고, 다양한 고용계약과 고용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없애지 말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자.

그것이 알고싶다

4. 흥준표의 청년·일자리 정책

“향후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중소기업 청년 초임 200만원 시대 단계적 실현(청년들의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후 2년간 최저임금의 150%(200만원 수준)을 미달한 경우 미달액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각각 50% 부담)”

“최저임금 1만원 임기 내 실현”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는 대학 교육비까지 100% 지원

“둘째 자녀 출산 시 1천만원 지원”

“셋째 자녀부터는 1천만원 지원 +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등록금 포함) 100% 지원”

〈그런데 말입니다〉

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공약?!”

#내꺼인듯_내꺼아닌_내꺼같은_공약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돼야”

한강타임즈 2017.02.21.

[한강타임즈]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자신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과 관련, “정부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으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전...



안철수 “중소기업 강화해 일자리 창출...대기업 임금의 80% 보장”

SBS 뉴스 3일 전 네이버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11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일자리 만드는 데 대기업...



유승민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3安 노동공약’ 발표

연합뉴스 2017.02.23. 네이버뉴스

saba@yna.co.kr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3安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3년 안에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 임금·안정 고용·안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는 문재인 후보, 중소기업 청년임금지원은 안철수 후보, 최저시급 1만원 실현 정책은 유승민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거의 다를 바 없었다. 세 공약 모두 실현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며 결국 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생길 부작용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흥준표 후보의 의중은 단시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 공공부문 전원 정규직화는 세금으로 국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하수 중에 하수 공약이다. 비대하고 경직된 공공부문을 더 악화시키는 길이다.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한시적 임금보장은 이러한 근본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노동·산업시장을 왜곡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최저시급 1만원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서라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 정작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 그동안 시장의 자유를 강조했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홍준표 후보이기에 표를 얻기 위해 급조한 공약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② “저출산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나?”

#출산수당 #허경영_3000만원

#홍준표_1000만원

- 둘째 자녀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 자녀부터는 1천만원에 대학 교육비까지 100% 지원하겠다고 한다. 2016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명 정도다. 둘째, 셋째 자녀수를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이다. 예산이 들더라도 효과가 보장된다면 추진해야겠지만,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현금지원으로 해결될 일도 아닐 것이다.

- 출산수당 아니냐는 비난도 피해가기 힘들다. 과거 홍준표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해 청년들에게 푼돈 쥐어주는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물론 대상자의 성격이 다르지만 현금지원이라는 포맷은 다르지 않다. 황당 공약이라 치부하던 허경영의 출산 시 3천만원 지급 공약을 떠올리게 한다.

- 특히 현금지원성 공약에 ‘포퓰리즘’이라며 진보정당을 비판해 온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이기에 공약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청년, 대선 TALK TALK

청미래 THINK TANK는 매달 주요사회 이슈, 청년 관련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
이번 주제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질과 대선정책블라인드 설문조사를 통해 느낀 점을 담았다.

✓ 19대 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은?

박OO(남,24세) : 국내는 탄핵, 국외로는 사드문제 등 한,미,북,중 외교관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확실한 정치신조를 가지고, 비전제시를 해야 한다.

안OO(여,20세) : 박 전 대통령을 상각하면서 최우선으로 드는 생각은 청렴결백한 대통령이어야 한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조와 절개, 학식과 덕을 겸비한 사군자같은 대통령이 되어야한다. 또한, 국민과 소통하고 나라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OO(여,19세) : 대통령은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주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청년들은 차기 대통령이 자신만의 정치적 주체성을 확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나라는 이끌어 나가길 원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청렴성과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하면서 느낀 점?

박OO(남,24세) : 비현실적인 정책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공공일자리 확대였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것이고 기술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되지만, 그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한다.

윤OO(여,25세) : 정책만 보면 다 옳다고 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이 실현가능해서 정책적으로 내세운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국민들이 정책을 잘 알아보지 않고 인물만 보고 뽑을까 걱정이 된다.

강OO(여,22세) : 청년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일자리 문제다. 재원마련은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공공일자리 자체가 세금으로 운영되다보니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떨어져 보인다.

조OO(남,25세) :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2위이다. 우선 제도를 정착시키고 국가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야근문화를 청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대선공약에 대해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실행은 가능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정책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특히 막대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질적인 개선을 우선시 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청미래 THINKTANK가 뽑아본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자질-

- ✓ 국민과의 소통능력
- ✓ 청렴성, 도덕성
- ✓ 비전과 주관

청년이어는미래

청년이어는 미래

청년, 일자리 정책 그것이 알고싶다

20170417